

이슈브리프 860호
(2026. 7. 8)

한몽 정상회담 전망과 제언: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제860호

박정후 tamarix@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7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경제안보 시대에 한몽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풍부한 핵심광물 보유량을 자랑하는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협력국이며,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협력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은 한국의 기술력과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을 결합하는 대표적인 상호보완 분야로, CEPA 체결 추진과 함께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기후환경,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개발과 유통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GTI 등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정부 간 협의체와 전담 기구를 통해 합의사항과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한몽 정상회담, 경제안보, 핵심 광물 공급망, 한반도 평화, 동북아 다자협력

2026년 7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이자, 2011년 이후 15년 만의 국민 방문이다.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정상 간 교류는 화상회의와 다자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열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축적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협력의 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결합한, 이른바 ‘경제안보 시대’에 접어들었다. 핵심광물과 첨단기술, 공급망의 안정성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에 각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공급망의 회복력(Resilience)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나담축제 참석의 의미

이러한 환경에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풍부한 희토류와 리튬, 텅스텐, 우라늄 등 핵심 광물을 보유한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에너지 및 물류 유통망 구축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 공동체 및 안보공동체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몽골이 지닌

전략적 가치에 주변국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몽골 역시 광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자본, 산업 경험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몽골의 외교적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방문이 몽골 최대의 국가행사인 나담축제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몽골 최대의 국가행사로, 한국 대통령의 나담 축제 개막식 참석은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양국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라는 제목으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 실천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몽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전망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둘째, 한몽 경제적 상호보완성 강화, 셋째,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다만, 주지할 점은 이 세 가지 기대 성과는 각기 독립적인 추진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협력 분야를 광물자원 개발 중심에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몽골은 광물자원 개발뿐 아니라 철도와 도로, 건설, 전력망, 철강,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비롯하여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및 기후

변화 대응, 금융, 보건의료,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고 사업 참여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함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새로운 협력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9년 양국의 에너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가 중단된 10개 아이막(道)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의 재추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몽골 정부가 공론화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건설에 대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발전소 건설과 전력망 운영, 원전 기술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어 향후 동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진전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최근 양국은 전략대화과 CEPA 협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투자 환경 개선과 공급망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체결된, 몽골-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의 여파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국 간 경제협정체결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양국 간 관광과 유학, 노동,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다.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지만,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광물 대부분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을 전제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몽골에 약 3,10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로 평가된다. 아울러 텅스텐, 리튬, 우라늄 등 다양한 전략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광과 제련, 가공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력과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 수요는 완벽하게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양국은 지난해 12월 울란바타르에 한-몽 희소금속센터를 개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광물 분석과 선광 및 제련 기술을 몽골측에 지원함으로써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 한국은 몽골에 부존된 희토류, 텅스텐,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탐사를 진행하고, 한국 기업이 해당 광산에 대한 우선 개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몽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골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북한과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상당한 수준의 상호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시에 몽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태도는 남북 모두와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외교적 위상을 형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몽골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북·일 비밀교섭을 주선하는 등 역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2014년 부터는 울란바타르대화(UBD)의 주재국으로서 동북아 국가 간 안보 증진과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의 장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몽골을 단순한 북한의 우호국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몽골이 보유한 외교적 공간과 중재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 정부 간 대화뿐 아니라 학술회의, 안보 대화, 인도적 협력 등을 망라한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양자 차원을 넘어 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 또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안점 및 제언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양국의 상호 번영과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과제의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몽골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무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주안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한국의 경제안보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몽골 광물이 한국으로 유통되는 경로는 크게 러시아와 중국으로 나눌 수 있다.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는 중국을 거치는 루트가 가장 유리하지만,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광종도 아닌 희토류가 자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몽골 또한 자국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외국의 참여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광물자원 수출의 약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몽골을 떠나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유입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 중 하나는 한국이 독자적인 희토류 정제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하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정제시설을 몽골 현지에서 공동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제된 희토류를 항공운송을 통해 한국으로 직접 반입하게 되면 운송 효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기술만으로 상업적 생산이 어렵다면, 희토류 정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과 협력을 추진하거나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한국-미국-

몽골 핵심 광물 3자 협의체',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포지(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몽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기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몽골은 2026년 GTI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사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GTI 회원국들 간 이루어진 논의와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제안되었던 GTI 독립 국제기구 전환과 북한 복귀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09년도에 회원국을 탈퇴한 북한의 GTI 재가입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정세와 회원국들의 대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의 회원국 복귀 여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 의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장국 몽골이 이와 같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몽골에 제2의 개성공단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몽골과 중국의 접경지역인 자뎡우드(Zamyn-uud) 자유 무역지대에 남북몽, 혹은 남북중몽 협력을 기반으로 광물 가공 및 유통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북한, 중국은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고, 몽골, 러시아는 광궤를 이용하고 있어 몽골 종단철도(TMGR)를 이용하여 중국을 오가는 유라시아

지역의 화물은 몽골 자밍우드 자유무역지대에서 화물 환적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규모 화물 환적 터미널과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향후 동북아-유라시아 간 대표적인 육상 물류 허브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몽골에서 생산되는 각종 원자재와 핵심 광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외국인 투자 및 운영 환경 개선 노력, 중국의 제3국 수출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북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유연성 제공 등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해외에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항구를 활용한 태평양-유라시아 유통로 신설이다. 몽골은 출해구(出海口)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하여 해상유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북한은 몽골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여 2007년 7월 20일, 당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몽골 방문 시, 나진, 선봉, 청진, 홍남, 원산, 남포, 해주항을 몽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몽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몽골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2014년 석탄 2만 톤을 몽골 내부 철도와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 나진선봉 특구로 시험운송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나선항 이용에 대한 관련국들 간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몽골은 오랫동안 염원하였던 태평양 출해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새로운 물류 허브의 운영과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양국 정부 간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요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범정부 협의체인 ‘한몽 공동위원회’가 양국을 번갈아 가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한몽 공동위원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및 진행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생성되는 주요 협력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양국에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담 기구는 정부와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양국의 주요 협력과제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몽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